

	<b>보 도 설 명</b>				 대한민국 대원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<b>배포</b>	'21.4.6.(화)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	<b>담 당 자</b>	이 지 형 사무관 (02-2100-2836) 김 경 문 사무관 (02-2100-2824)	
	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장 우 철(044-201-3317)			홍 승 희 사무관 (044-201-4129)	

**제 목 : 정부는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 
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협의 중입니다.[동아일보 4.6일자  
보도에 대한 설명]**

## 1. 기사 내용

- ☐ 동아일보는 4.6일자 “신규분양 대출, LTV-DTI 규제 완화” 제하의 기사에서
- “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”,
  - “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집값의 60% 수준인 중도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”,
  - “대출 한도를 신축 아파트에 한해 10~20%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 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현재 관계부처간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강화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,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.
- ☐ 이와 관련하여, 상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니,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  
할 경우 출처를 표기  
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## 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